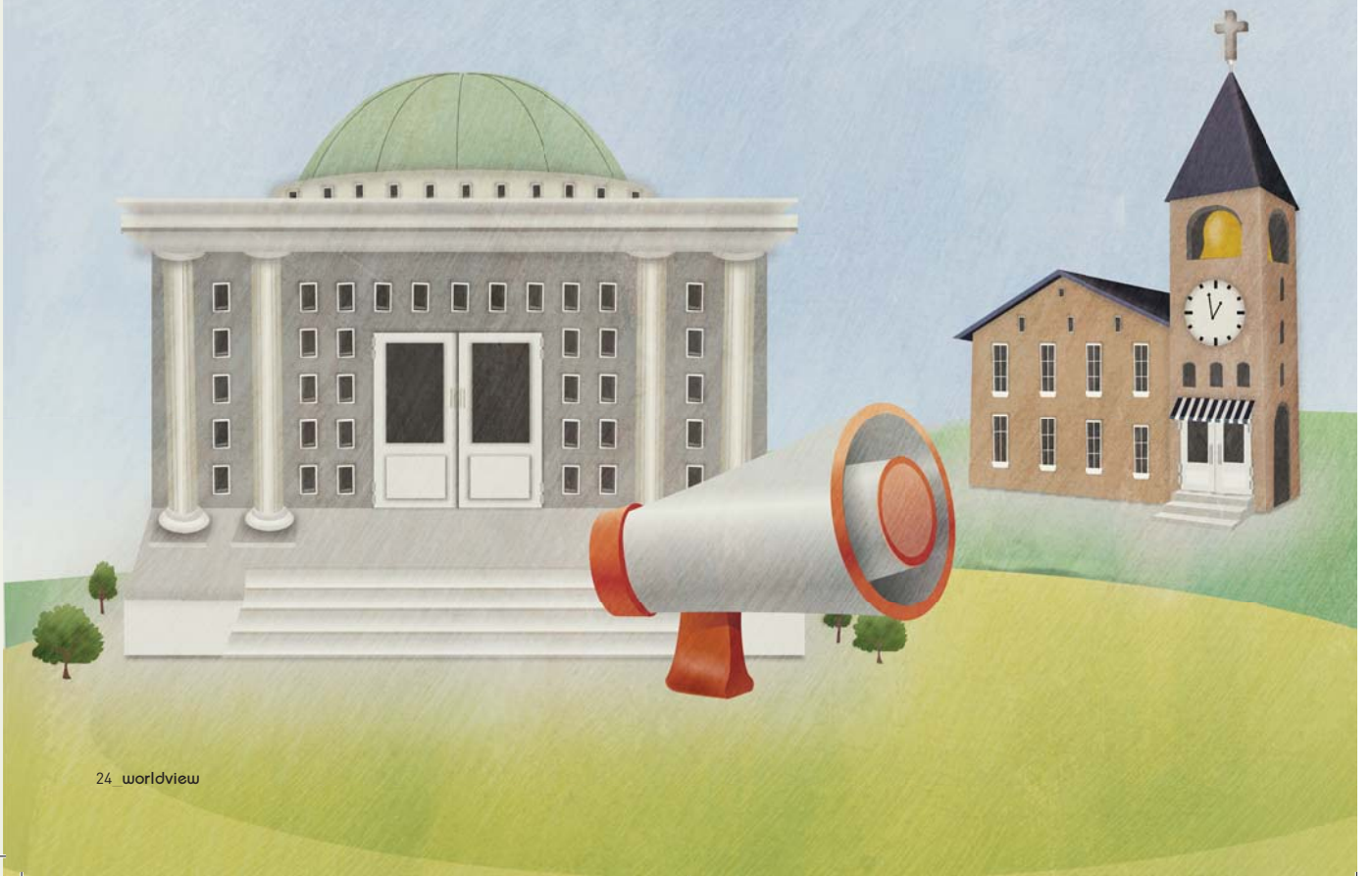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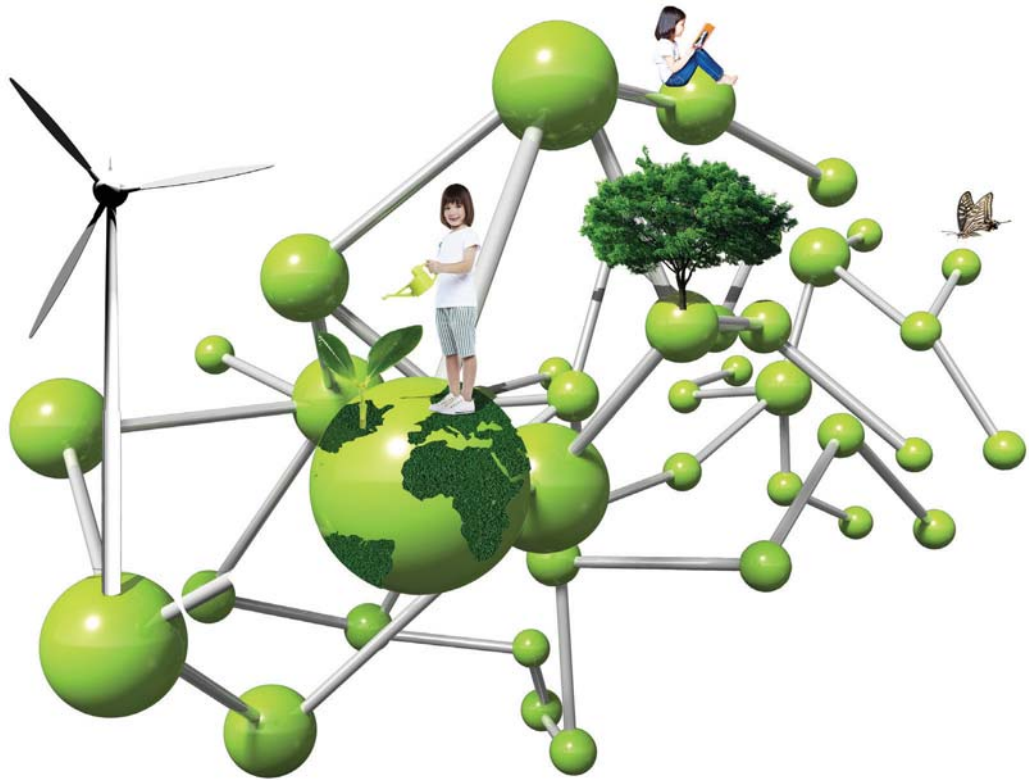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기독교 교육운동의 대응

정병오 (前 좋은교사운동 대표)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경쟁과 자율'이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우리 교육은 최악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통념을 무너뜨렸다. 학습부진아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간, 교육청 간 경쟁을 부추겨 그나마 입시로부터 보호를 받던 초등학교생들마저 문제풀이 교육과 강제 보충수업으로 몰아넣었다. 고교 다양화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자율고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중학교 입시교육 강화,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른 고교진학 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입시 경쟁의 강화는 인성교육의 약화와 학교폭력의 심화, 교실 수업과 생활 지도의 붕괴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까지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박근혜 정부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을 목표로 삼았음은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독교적 교육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환영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은 일반이나 기독교를 막론하고 동의할 만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론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교육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에 비추어볼 때 박근혜 정부가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은 "대입 전형 방식의 단순화와 예측가능성 강화", "대학 특성화 및 지원 강화", "자유학기제 및 체육교육 강화를 통한 인성과 진로 교육 강화",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초등 돌봄 확대"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 교육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우리의 교육 현실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대학서열화나 성적 위주의 한 줄 세우기 대학 선발 방식, 갈수록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교육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의 개혁과 비리 척결, 학교 자치와 자발성을 가로막는 관료 행정, 인성 교육의 실종과 학교 폭력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구상이나 로드맵은 아예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교육 개혁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예정에 없다.

집권 초기에 교육 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했지만, 교육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시행 계획의 부재, 그리고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실패하여 혼란만 가중시켰던 역대 정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집권 초부터 소극적인 박근혜 정부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미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전망하듯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큰 사고를 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기독교사 운동 혹은 기독교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박근혜 정부가 구호로 내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치며 국정과제로 제시한 세부 정책들은 아직까지 의제로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 의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정책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는 셈이다. 기독교 진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공약 의제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은사와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녹아낸 정책 세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지난 2·3월, 좋은교사운동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 및 ‘온종일 돌봄 교실’과 관련해서 기독교 교육적 가치와 현실성을 담보한 정책을 제시해 교육부와 청와대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의제들에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를 지향하는 학교 만들기 등 중요하지만 빠져있는 의제들에 대한 세밀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진영이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성 교육의 약화, 가정 해체 및 빈곤 가정 증가에 따른 방치 아동 문제,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학교 폭력 등에 대해 교회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회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사역에 재정과 인적 자원을 투자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 학교의 멘토링 사역을 감당하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같은 단체들도 더 많이 일어야 한다. 또, 회복적 관점에서 갈등과 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훈련해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이나 갈등조정자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환경이 되지 않는 아이를 복음의 능력으로 품고, 기독교적 평화의 가치를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가는 것이다.

둘째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의제이지만 현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정책의제와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CCTV 설치 등 감시 강화나,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같은 엄벌주의 외에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에 근거한 갈등 해결과 화해, 회복의 노력들을 학교 상황에 접목한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과 이에 근거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정책 대안들을 내놓아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정부의 교육 정책에 기독교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실천 안을 제시하고, 빠뜨린 부분은 일깨워 이론적인 정교함과 실천적인 탁월성을 함께 제시하여 정부의 교육 정책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자. 다행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양한 목소리에 열려 있다는 것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정병오 윤리교육을 전공하고 중학교에서 20년 가까이 도덕 교사로 근무했다. 교직 초기부터 기독교사운동에 참여해 지난해까지 기독교사들의 연합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과 ‘대한민국교육봉사단’ 공동대표이다. 저서로는 『시대를 뒤서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아이』, 『선생님은 너를 응원해』가 있다.

